

제16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Session 21: 공유와 기본소득

7월 8일(금요일) 오후 3시 45분

‘공통적인 것’,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 소득

정남영

모든 남성은 몸이 일할 만한 상태일 때 일을 하는 한에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죽는 날까지 임금을 받아야 한다. 모든 여성은 몸이 일할 만한 상태일 때 일을 하는-살림을 하거나 아이들을 키우거나 하는-한에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죽는 날까지 임금을 받아야 한다. (D. H. 로렌스, 1915년의 한 편지에서)

1. 우리의 시대는 근대를 영속화하려는 힘과 근대를 벗어나 대안근대를 향하는 힘이 공존하는 시대이다.
2. 대안근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면 근대는 떠나야 할 영토, 혹은 벗어나야 할 껍데기, 혹은 삶의 감옥이다.
3. 근대의 삶은 자본(경제권력)과 국가(정치권력)의 이두체제(duopoly)로 특징지어진다.
4. 자본과 국가의 지배는 교환주의(exchangism)¹⁾와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집단화를 기반으로 한다. 교환주의는 자본에 특유한 보편성과 연관되며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집단화는 국가에 특유한 보편성과 연관된다.
5. 근대 사회에서 자본가가 아닌 대부분의 시민들의 소득(income)은 주로 임금의 형태로 취해진다. (이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해 이리저리한 정도로 보완된다.) 임금이란 노동자의 노동력과 교환된 가변자본이다. ‘노동 = 임금 = 소득’이라는 등식은 교환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6. 교환주의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과 교환한 개인만이 ‘사후에’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전제가 숨어있다.²⁾ 교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생긴다. 자본은 이들을 방치하고 국가가 복지로 뒤치다꺼리를 한다. 그러나 복지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다.

7. 자본의 본질은 가치증식이다.³⁾ 주지하다시피 등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교환은 가치증식이 일어나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가치증식의 기반인 불평등과 비(非)자유를 가리는 위선적 표면이다.⁴⁾ 자본의 교환주의는 환상이요 외관이요 가면이며 가짜 합리화이다. 사실 자본은 교환 없이 타인의 노동을 전유한다.⁵⁾

8. 이런 의미에서 자본이 사회에 ‘소득 = 임금’의 등식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평등을 담보하는 교환의 원칙을 스스로에게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타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라도 ‘소득 = 임금’의 등식은 강력한 현실로서 존재해왔다.

9. 현대에 들어와서 (이른바 정보화 이후) 자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이른바 경기순환론에서 말해온 공황과는 성격이 다른 위기이다. 첫째, 자본에게 ‘평등과 자유’라는 그럴듯한 표면의 노릇을 해주는 교환주의를 뒷받침하는, 실제로 교환가치의 기반 역할을 한 가치법칙이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다.⁶⁾ 상품교환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그 합리성의 맞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환의 비율이 어떻게든 정해진다면 그것은 시장의 작동이라기보다는 권력의 작동이 아닌가.

10. 둘째, 무한복제가 가능한 비물질적 생산물이 점차 우세해지면서 희소성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희소성의 원칙은 소유의 토대이자 일반화된 교환의 토대이다. 공유될 수 없으므로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나눌 수 없으므로 맞교환되어야 한다. ‘제2의 종획’(the second enclosure)⁷⁾은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11. 셋째, 과거 기계가 고정자본으로서 차지했던 위치 – “기계는 고정자본의 가장 적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고정자본은 자본의 자기관계에 관한 한은 자본 자체의 가장 적합한 형태로 나타난다.”(693) – 를 이제 정보가 차지했다. 그런데 기계는 “고정자본의 가장 적합한 형태”였을 때에도 “특수한 사용가치의 한계에 간혀”있었다. 이에 반해 정보는 이미 베풀어진 성격을 띤 생산물인데다가 디지털 기계를 통해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기에 특수한 사용가치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는 오로지 인간의 두뇌와 연결되어서만 작동한다. 인간이 고정자본이 되는 것이다.⁸⁾ (스스로 소유하는, 자기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다.) 기존의 권력을 아직 놓고 있지 않기에 자본(화폐)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지만, 언제 정보의 흐름이 자본(화폐)의 흐름을 흘러넘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12. 사실 정보(지식)가 생산력이 되면서 가치법칙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진 것이다. 가치법칙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측면은 사회적 연결성의 고도화, 즉 협력의 고도화이다. 협력이 고도화되면, 협력에 참여한 개인들 각각이 기여한 바를 확정할 수 없다. “분업이 발전하면 개인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개별적 노동작업들은 전체의 일부가 되어 그 자체로 가치나 사용가치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내 생산물이다, 이것을 내가 가질 것이다’라고 노동자가 주장할 것이 없다.”(709) 따라서 교환의 비율을 확정할 수 없다.

13. 자본의 욕구 자체에 추동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생산기계로 연결된 지구 전체를 놓

고 볼 때, 지구인 모두가 잠재적으로는 생산에의 참여자이다. 자본이 의존하는 사적인 것과 국가가 의존하는 공적인 것은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 적실하게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적실하게 상응하는 것은 오로지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다.

14.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모두의 자원을 관리하며 모두가 생산에 참여하고 모두가 분배에 참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는 인류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사적인 것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에 의해 매개되어야만 개인은 사회에 참여하는 일원이 된다. 공적인 것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에 종속되어야만(국민이 되어야만) 개인은 사회에 참여하는 일원이 된다. (국가란 사회의 일부가 ‘전체’가 되어 사회의 나머지 부분을 종속시킨 것-덧코드화over-coding-에 지나지 않는다.)

15. 공통적인 것의 시대에 자본이 ‘소득 = 임금’이라는 등식을 부과할 근거(합리성)는 없다. 따라서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발명해야 한다. 나는 국가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공동체인 커먼즈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급(self-provisioning) 능력을 키우는 운동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일수록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당장의 현실적 조건에서는 기본소득⁹⁾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커먼즈 운동과 기본소득운동을 서로 대립되거나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중첩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를 활성화하는 상승작용이 가능하다.

16. 기본소득의 진정한 문제는 단지 임금을 더 받고 말고의 문제, 이윤을 더 늘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이다. 그동안 자본주의를 뒷받침해온 교환주의를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더 많은’을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욕망과 의식이 필요하다.

17. ‘더 많은 임금’ 혹은 ‘더 많은 복지’는 모두 자본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의 요구이다. 불변자본의 몫과 가변자본의 몫 사이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자본에 의해 재현되는(represented) 것을 전제한다. 우리의 삶은 ‘경제적’ 삶이고 삶의 상승은 ‘경제성장’이 된다. 재현 메커니즘일 뿐인 의회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무관하듯이 자본에 의한 재현을 매개로 하는 경제적 삶도 진정한 의미의 경제와 무관하다.

18. 진정한 의미의 경제는 생활수단의 획득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발전에, 즉 개인들이 자신의 존재의 충만함을 발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발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9.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생활수단의 획득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시간을 늘이는 데 혈안이 되어왔다.¹¹⁾ 자본의 무능과 노욕(老慾)은 노동자들에게 임금노예의 굴레에 덧붙여 부채 노예의 굴레도 씌웠다. 임금 형태의 소득의 부족분이 부채 형태로 전환된 것인데, 노동자들에게 소비에 쓰일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맑스가 들으면 놀랄 일이다. 맑스에게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매우 낭만적인 일이고 일탈이며 예외이기 때문이다.¹²⁾ 이제 이 “일탈”과 “예외”가 정상(?)적인 현실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0. 이 모든 것은 자본의 구성 측면에서는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불균형적 상승을 나타낸다. 임금의 일부가 이자로 자본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의 이윤율의 저하를 가속하는 동시에 구매력의 저하를 가속한다. 앞에서 말한 자본이 직면한 위기의 측면들로 인해 이러한 저하 현상을 시원하게 상쇄할 길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임금노예와 부채노예라는 이중의 굴레에 처한 노동자들만큼이나 자본도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가설적인 말이지만, 기본소득은 이러한 자본이 생존을 이어가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

21. 기본소득이 위기에 처한 자본을 도울 수도 있다는 점은 기본소득의 시행에 대해 자본가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¹³⁾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근대적 삶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는 의미이다.

22. 앞에서 말했듯이 기본소득에는 자본이 의존해왔던 교환주의에 대한 거부가 들어있다. 자본주의적 교환주의는 교환의 일반적 필요(교환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할 필요)에서 나온다. 그리고 교환의 일반적 필요는 자급의 결핍에서 나온다. 자급경제(subsistence economy)인 원시 사회를 포함하여 자본주의 이전 단계의 사회는 모두 자급 사회였다. 달리 말하자면, 생산자들의 능력이 생산수단 및 생활수단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분리가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것은 근대에,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이다. 예의 분리는 소외된 노동의 발생과 동일한 사건이다. 따라서 교환주의에 대한 거부는 노동거부(the refusal of work) – 즉 소외된 노동에 대한 거부 – 를 함축한다.

23. 노동의 거부는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 거부인가?¹⁴⁾ 그렇지 않다. 소외된 노동의 출현, 교환을 위한 노동의 출현이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진 결과이다. 근대 국가가 공동체를 대신하고 교환을 위한 노동 즉 소외된 노동이 자급을 대신한 것이다.

24. 이것을 발전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이 있다. 진화주의 혹은 진보주의라고 불리며 서양중심주의 혹은 유럽중심주의의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원시 사회를 태아기의(embryonic) 사회, 혹은 아직 사회가 되지 못한 사회, 혹은 동물적 단계의 사회라고 보게 된다.¹⁵⁾

25. 다행히도 인류학 분야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파열시키는 연구들이 나온 지 꽤 오래되었다. 이 연구는 원시 공동체들의 자급경제가 오히려 바로 최초의 ‘풍요 사회’이며 ‘여가 사회’라는 것을 발견했다. 원시 부족들은 생존수단의 획득에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았으며 남는 많은 시간을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썼다. “‘자급경제’라는 용어는 결핍, 즉 그 사회의 유형과 기술에 내재한 무능에서 나오는 필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반대로 무용한 잉여의 거부, 생산활동을 욕구의 충족에 일치시키겠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만 저[원시] 사회들의 경제적 조직을 서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¹⁶⁾

26. 전(前)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자들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인간의 삶을 살았다. 생산이 인간

을 위한 생산이었기 때문이다.¹⁷⁾ 이에 반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은 동물의 삶이다. 평생을 생존수단의 획득을 위해 일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¹⁸⁾ 기본소득은 이 동물의 삶을 다시 인간의 삶으로 되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7. 클라스트르의 원시 사회에서는 경제를 정치가 통제하고 정치를 사회가 통제했다. 다른 시대의 커먼즈에서도 정치는 자율적 권력으로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공통의 자원을 관리하는 규칙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곧 정치였다. 여기서 명령-복종 관계는 있을 수 없다. 근대 이전 사회들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일,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이고,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이제 인간의 영원한 조건이 된 것인가? 기본소득의 시행을 둘러싼 싸움이 그 한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경제적 실행을 정치적 행동을 통해 현실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28. 기본소득의 실행은 그것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자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공적인 영역(국가)이 보완하는 것인 듯 보인다. 틀린 말이 아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더 높인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면 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동물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가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바로 예의 동물의 삶을 구성하는 두 차원이기 때문이다.

29. 그렇다면 사적인 것/공적인 것의 짝과는 다른 개념(사유의 지평)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국가와는 다른 성격의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 공동체는 근대 국가 이전의 공동체들(원시 공동체들, 봉건 사회의 공유지 공동체들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들의 매력이 우리의 근대중심주의를 깨부숴주는 효과를 가질지라도 그 공동체들을 그대로 미래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¹⁹⁾

30. 여기서 우리는 맑스의 통찰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일부에서 맑스는 자본주의 이전에서 자본주의를 거쳐 자본주의 이후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을 세 형태의 사회의 연속과정으로서 뽑아낸다.²⁰⁾ 여기서 제시되는 맑스의 통찰은 역사를 여전히 직선형으로 본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① 첫째 형태에서 둘째 형태(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만은 않으며 ② 둘째 형태를 그 영속성의 가면을 벗기고 일시적인 과도기로 제한하고 ③ 그러면서도 둘째 형태의 ‘역사적 사명’-셋째 단계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결코 진보의 증가로만 구성된 단순한 직선형은 아니다.

31. 셋째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의 종식이다. “교환가치들에 기초한 노동은 교환을 통해서만 일반적인 것으로 정립된다.”(171) 이는 둘째 형태에서의 일이다. 이에 반해 셋째 형태에서는 “전체 그 자체가 이미 매개되어 있다. 즉 공동체적 생산, 공통체성이 생산의 토대로서 전제된다. 개인의 노동은 처음부터 사회적 노동으로서 정립된다.”(172)²¹⁾

32.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세 단계에 따라 분배의 세 형태가 존재한다. ① “개인들의 자연발생적이거나 정치적인 상호 위계 및 종속에 기반을 둔 분배” ② “모든 노동생산물, 부 및 활동들의

사적 교환”(자본주의) ③ “생산수단의 공통적 전유 및 통제에 기반을 두고 연합한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교환.”(이상 159) 임금을 소득의 유일한 형태로 보는 것은 둘째 형태의 교환을 유일한 분배의 형태로 보는 것이다.

33. 사실 맑스의 ‘3단계’론은 세 개의 사회형태-이를 철학적으로는 ‘보편성’(혹은 ‘일반성’)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 형태의 ‘개인성’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둘째 단계 즉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사물을 통한 연관”은 “개인성의 산물이다. 역사적 산물이다. 그것은 개인성의 발전의 특정 국면에 속한다.”(162) 셋째 단계는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그 공동체적, 사회적 생산성을 사회적 부로서 삼는데 기반을 둔 자유로운 개인성(Freie Individualität)”(158)의 단계이다. 사회의 성격 혹은 보편성은 이 개인성과의 연관 하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34. 이 셋째 단계에서 개인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정치체/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개념이 ‘공통적인 것’이다. 근대의 ‘공적인 것’은 개체들의 외부에서 개체들에게 부과된 ‘전체’(덧 코드화)인 반면에, 공통적인 것은 개인들에게 그들의 활력을 구성하는 관계로서 내재한다. 교환 가치(화폐)에 의한 매개의 부재는 셋째 형태의 보편성 즉 공통적인 것이 첫째 형태의 보편성과 공유하는 속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째 형태의 보편성을 원초적 형태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매개되어 있음’은 첫째 형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속성이다. 그것은 개인성의 고양과 연관된다.

35. 첫째 형태에서 개인성은 보편성(즉 원초적 형태의 공통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와의 거리를 성찰하여 그 성찰을 사회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행동의 동기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개인들이 곧 사회였고 사회로서 정치체였다.

36. 셋째 형태에서는 예의 거리-거리는 곧 차이이며 차이는 생성의 원천이다-가 성찰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활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제 개인들과 사회가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개인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언제든지 새로운 생성과 그 생성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사회형태, 삶형태를 낳을 수 있다.

37. 둘째 형태에서는 보편성이 개인들을 종속시켰으나 이제 셋째 형태의 보편성 즉 공통적인 것은 개인들의 생성의 함수이다. 개인들이 생성하는 대로 사회도 생성한다. 이 셋째 형태의 사회의 “자유로운 개인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특이성’(singularity)이다.²²⁾ 이에 반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짝에 종속된 개인성, 즉 보편성에 굴복한 개인성은 ‘정체성’이다.

38. 공통적인 것과 특이성의 상호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규정짓는다. 이는 ‘매개’를 기본 성격으로 하는 모든 구조들(선거제도, 언론 등)의 폐지, 정치와 경제의 분리의 폐지, 모든 정체성들의 재특이화(resingularization)를 함축한다. 사회적 연결 관계들을 통해 모두 함께 생산하고, 공통의 자원을 모두 함께 관리하며, 그 결실을 모두 함께 전유한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오로지 개인들의 특이한 활력의 상승을 위한 것이며, 바로 이 상승의 사례들이 다시 연결되고 네트워크되어 공동체는 새로운 공통적인 것으로 상승한다. 민주주의란 어떤 통치 도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 자체를 나타낸다.

39. 근대를 벗어나서 대안 근대로 향하는 이행은 공적인 것/사적인 것의 세계에서 공통적인 것의 세계로의 이행이며, 국가와 자본의 세계에서 커먼즈의 세계로의 이행이고, 또한 정체성의 세계에서 특이성의 세계로의 이행이다. 그것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이행이고 동물에서 인간으로서의 이행이다. 기본소득운동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의미는 이러한 이행의 가속기가 되는 데 있다. 모든 이행이 그렇듯이 이 이행도 두 세계의 경계가 두부를 가른 듯 뚜렷하여 하나의 세계가 끝나는 다음날 그 다음 세계가 시작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세계는 이미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적인(actual) 것으로서, 다른 하나는 잠재적인(virtual) 것으로서. 모든 변화는 잠재성의 차원에서 시작하며, 어떤 사물의 의미는 바로 이 잠재성의 차원에 놓여있다. 기본소득의 의미 또한 그러하다. ♣

삶의 진정한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직관적, 종교적 차원에서 **의식-전면적인 의식이다-을 발전시키는** 중대한 활동이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일이며 성인들의 중대한 게임이다. 모든 다른 일은, 노동이든 돈이든, 이것으로 귀착되고 이것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 중대한 게임인 진정한 살아가는 일, 섬세하게 움직이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몸으로 깨닫도록 우리의 신체를 발전시키는 일, 우리의 의식 전체를 심화시키고 넓히는 일,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의 초라하고 갑갑하고 제한된 노예로 남지 않고 진정으로 성인이 되는 일.

그러나 우리는 먼저 화폐라는 이름의 새의 목을 비틀어서 의식주라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D. H. 로렌스, 1928년의 한 편지에서)

-
- 1) 여기서 ‘교환주의’는 일반화된 상품화의 체계, 혹은 일반화된 등가교환의 체계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모든 것이 상품화 가능하다든가 모든 사물에 가격에 매겨질 수 있다고 보는 사고는 이 교환주의에서 도출된다.
 - 2) “교환가치들에 기초한 노동은 교환을 통해서만 일반적인 것으로 정립된다.” “첫 경우[화폐의 매개가 필연적인 경우]에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의 교환가치로 고양되고 이 교환가치들이 교환됨으로써 사후에 정립되었다.” 이상 Karl Marx, *Grundrisse: Foundation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ught), Trans. by Martin Nicola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3) 171, 172면. 이 발표문에 등장하는 모든 맑스로부터의 인용은 이 책에서의 인용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면수만 적기로 한다.
 - 3) “가치는 자기영속적이고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만 자본이다.”(639)
 - 4) “현재의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격의 정립과 유통은 표면적 과정이며 그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과정이 진행된다. 여기서 표면적인 개인적 평등과 자유는 사라진다.”(247)
 - 5) “교환가치체제는 **자본에** 의존하는데, 자본으로부터 분리해서 보면 표면상으로는 **독립적인** 체제인 듯 보인다. 이는 단지 **환상**인데, **필연적인 환상**이다. 따라서 교환가치의 체계-노동을 통해 측정되는 등가물들의 교환-가 **교환 없이 타인의 노동을 전유하는 것(Aneignung fremder Arbeit ohne Austausch)**으로, 즉 노동과 재산의 완전한 분리로 전환된다고 해서,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그 숨겨진 배경임을 드러낸다고 해서 놀랄 이유는 더 이상 없다.”(509)
 - 6) 이는 맑스에 의해서 이미 추론된 바 있다. “직접적인 형태를 띤 노동이 부의 큰 원천이 되기를 그치자마자, 노동시간이 척도가 되기를 그치며 또 그렇게 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환가치는 사용가치의 척도가 되기를 그치게 마련이다. 대중의 잉여노동(Die Surplusarbeit der Masse)은 일반적 부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기를 그친다. 소수의 비노동이 인간정신의 일반적 힘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기를 그치듯이 말이다. 그 결과로 교환가치에 기반을 둔 생산은 무너지고 직접적인 물질적 생산과정 자체는 그 궁극과 적대의 형식을 벗는다.”(705)
 - 7) 지적 소유권, 저작권, 라이선스, 특허 등등.

- 8) “노동시간의 절약은 자유시간 즉 개인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시간의 증가와 동등하다. 이 발전은 다시 가장 커다란 생산력인 노동의 생산력에 작용한다. 직접적 생산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고정자본의 생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인간 자신이 이 고정자본이다. 그런데 직접적 노동시간이 자유시간과의 추상적 대립 속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부르주아 경제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푸리에가 생각하듯이 노동은 유희가 될 수 없다. 분배의 지양이 아니라 생산방식 자체의 더 높은 형태로의 지양을 궁극적 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의 큰 기여이기는 하지만 말이다.”(711-12) “그리고 마라치Christian Marazzi가 주목하듯이, 현재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행은 ‘인간생성적 모델’anthropogenetic model을 향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삶정치적 경제로의 전환인 것이다. 살아 있는 존재가 고정자본이 되는 것이 이러한 변형의 중심에 놓여있으며 삶형태의 생산이 부가가치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지식—이는 직장업무에서 획득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직장 외부에서의 활동에서도 자동화되고 컴퓨터화된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며 축적된다—을 가동시키는 것이 직접적으로 가치를 생산한다. 그렇다면 이 ‘머리와 마음의 노동’이 가진 변별적 특징은 생산의 객체가 실제로는 사회적 관계나 삶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생산의 주체라는 역설이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제』(사월의책, 2014) 199면.
- 9) 여기서 내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생활이 가능한 만큼의 소득을 평생 동안 무조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등의 형용어를 넣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 발표문의 목적은 이 제도의 실행의 구체적인 현실적 조건이나 구체적 형태를 논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그냥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 10) “개인들의 자유로운 발전, 따라서 잉여노동의 정립을 위한 필요노동의 단축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노동 일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이렇게 자유로워진 시간과 모두를 위해서 생산된 수단에 의하여 가능해진,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등의 발전이 상응한다.”(706) “진정한 부는 모든 개인들의 발전된 생산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는 노동시간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가능한 시간에 의하여 측정된다.”(708)
- 11) “자본은 노동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의 형태로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노동시간의 형태로는 감소시킨다.”(706)
- 12) “이런 종류의 신용은 정치경제의 낭만적, 감상적 부분에, 그 일탈, 과잉, 예외에 속하지 규칙에 속하지 않는다.” Karl Marx, “Comments on James Mill”.
- 13)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해서도 이익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http://www.huffingtonpost.com/scott-santens/why-should-we-support-the_b_7630162.html 참조.
- 14) ‘무노동 무임금’ 태제는 한때 노동자들에 의해 자본가들에게 가해지는 슬로건이었으나(‘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어느덧 자본가들이 파업노동자들에게 대는 칼이 되었다.
- 15) 이에 대해서는 Pierre Clastres, “Copernicus and the Savages”, *Society against the State*, Trans. Robert Huerey and Abe Stein (Zonebooks : New York, 1989) 참조.
- 16) Pierre Clastres, “Society against State”, *Society against State*, 195면.
- 17) “이러한 식으로 아무리 협소한 민족적·종교적·정치적 규정 속에서일지라도 인간이 항상 생산의 목적으로 나타나는 옛날의 관점이 생산이 인간의 목적이고 부가 생산의 목적인 현대 세계와 비교할 때 훨씬 숭고하게 보인다.”(488)
- 18) 원래 원시 사회에 대해서 쓰인 ‘자급경제’는 바로 이러한 의미였다.
- 19) “발전의 이전 단계에서 개별 개인의 삶은 더 충만했던 것처럼 보인다. 개인이 아직은 자신의 관계들을, 그 관계들이 자신으로부터 독립한 사회적 힘과 관계로서 자신과 대립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한껏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의 충만함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또한 저 완전한 공동화(空洞化)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믿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부르주아적 관점은 저 낭만적 관점과의 대립을 넘어선 적이 없으며 따라서 낭만적 관점은 그 축복받는 종말까지 정당한 대립물로서 부르주아적 관점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162)
- 20) “인간들(person)의 상호의존(이는 처음에는 완전히 자연발생적이다)이 첫 번째 사회형태인데, 여기서 인간의 생산성은 미미하게만 그리고 고립된 지점들에서만 발전한다. 사물에의 의존성에 기초한 개인들의 독립성이 두 번째 거대한 사회형태인데, 여기서 비로소 일반적인 사회적 질료교환의 체계, 보편적 관계의 체계, 전면적 욕구와 보편적 능력의 체계가 형성된다. 개인들의 보편적 발전과 그 공동체적, 사회적 생산성을 사회적 부로서 삼는 데 기반을 둔 자유로운 개성이 셋째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셋째 단계의 조건을 창출한다.” (158)

- 21) “그래서 그가 창조하거나 그 창조작업을 돕는 생산물의 특수한 물질적 형상이 무엇이든, 그가 자신의 노동으로 산 것은 특정의 특수한 생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생산에의 특정의 참여이다. 따라서 그는 교환해야 할 특수한 생산물이 없다. 자신의 생산물은 **교환가치가 아니다**. 생산물은 각자에게 일반적 성격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특수한 형태[즉 화폐]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없다. 교환가치의 교환에서 필연적으로 창출되는 분업 대신에 각자가 공동체적 소비에 참여하게 되는 노동의 조직화가 발생한다. 첫 경우 [화폐의 매개가 필연적인 경우]에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이 교환가치로 고양되고 이 교환가치들이 교환됨으로써 사후에 **정립되었다**. 둘째 경우에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전제되며, 생산물들의 세계에의 참여, 즉 소비에의 참여는 서로 독립된 노동 혹은 노동생산물의 교환을 통해 매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이 활동하는 사회적 생산조건들을 통해서 매개된다. 따라서 각자의 노동을 (자신의 생산물 또한) 직접적으로 **화폐로, 실현된 교환가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노동을 **직접적으로** 일반적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노동이 화폐와 교환가치로 되어야 하는, 그리고 사적인 교환에 의존하는 조건들을 부정하는 것이다.”(172)
- 22) “특이성은 유럽 사상에서 둔스 스코투스와 스피노자로부터 니체와 들뢰즈로 이어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개념이다(우리는 5부 끝머리의 「인간에 관하여 2」에서 유럽 사상의 이 대안적 노선에 관해 논한 바 있다). 정체성과 비교할 때 특이성 개념은 세 가지 주된 특징으로 규정되는 데, 이 특징들 모두가 특이성을 본래적으로 다양성과 연결시킨다. 우선 모든 특이성은 자신 외부의 다양성을 가리키며 그것에 의해 규정된다. 어떤 특이성도 홀로 존재하거나 파악될 수 없다. 특이성의 존재와 정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특이성들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 둘째, 모든 특이성은 자신 내부의 다양성을 가리킨다. 각각의 특이성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분할들은 특이성의 정의를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구성한다. 셋째, 특이성은 언제나 다르게 되기의 과정, 즉 시간적 다양성에 관여한다. 사회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다른 특이성들과의 관계와 각각의 특이성들 내부의 다양성의 내적 구성이 끊임없이 유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번째 특징은 앞의 두 특징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공통체』 462-63) 여기서는 맑스의 3단계론을 활용하다보니 셋째 단계에만 ‘특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었으나, 클라스트르의 성취를 이어받은 인류학자들은 이미 원시 사회를 서술하는 데 ‘특이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